

# Hot Issue & Cool Vision

2004/06/15

## 미국 GPR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상현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회 간사)

### 차례

주한미군 12,500명 감축의 의미

GPR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주한미군 감축과 우리의 대응

#### 내용 문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28-27 동원빌딩 5층(우110-759)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전화 (02)739-0611 / 팩스 (02)739-0616 / e-mail kifs@kifs.org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 미국 GPR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상현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회 간사)

### 주한미군 12,500명 감축의 의미

미국은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600명을 포함해 모두 1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온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어젠다에서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이라크 파병,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미측이 제시한 2005년말까지라는 감축일정표는 미2사단 등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는 2007년부터 감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상정했던 우리 정부의 일정과는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감군시기 문제가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정도까지 자주국방 능력의 증대와 연동하여 미군이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5년말까지 12,500명 감축의 여파는 당분간 안보공백 우려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서두르는 의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 필요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음모론적 시각과 근거없는 추측이나 오해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가장 큰 그림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이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 직후부터 미 국방부가 연구해온 군사혁신과 군 변환(Transformation)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변환은 적어도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industrial age force)으로부터 정보화 시대 군사력(information age force)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CAISR, 원거리 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기동성을 중시하는 군사력 자체의 속성 변화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냉전기 군사태세를 탈냉전기 군사태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테러, WMD 등--에 대처하여 배치 위주에서 기동 위주로 군사력 운용의 방식을 바꾸고, 필요할 경우 동맹국 관계와 해외주둔정책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군변환은 미국의 글로벌 차원 방위태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군사력의 유형, 소재지, 역량 및 동맹관계까지 포함하는 전반적 update 개념이다. 그러한 전략 변화가 지금 논의되는 GPR이고, 그 일환으로 독일, 일본, 한국의 미군이 재조정되는 것이다.

군변환이 시행될 경우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 중점은 보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하고, 한곳에 고정된 군사력 배치에서 순환배치로, 숫자보다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전략이 운용될 것이다. 앞으로는 미군이 배치된 장소에서 싸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시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 파견할 수 있는 능력 보강이 매우 중요해진다. 96시간 내 분쟁 지역 파견을 목표로 진행중인 스트라이커 여단으로의 개편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 고위 관리들의 입을 통해 언론에 꾸준히 흘러나왔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미 국방부가 재독미군 71,000명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아시아에서도 100,000명 중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병력 중 행정요원 중심으로 약 15,000명을 감축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금년 3월 25일 린스펠드 국방장관과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밝히면서 앞으로 미군은 미국에 우호적인 곳에만 주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난 15년 동안 유지돼 왔던 주한미군 37,000명 체제는 이제 무너졌고 잔류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활동반경, 지휘체계 등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GPR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주한미군 12,500명 감축으로 초래될 안보적 영향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는 우선 이라크로 차출되는 병력은 대부분 보병으로 병력의 성격과 이동 규모를 볼 때 실질적인 안보 공백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전력증강을 위해 향후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신속기동여단 등 전시증원전력이 한반도에 2~3일이면 도착할 것이므로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90년대 말까지 국방부가 계산한 전력지수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전체 우리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30% 정도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2사단 2여단 병력이 이라크로 이동하게 되면 일부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인 안보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당장은 물리적 안보 공백보다 우리 국민이 느낄 심리적 불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안보 불안은 경제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군감축에 대해 국내에서 보혁간 다른 목소리가 자칫 사회갈등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병력 12,500여명이 빠져 나가고,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군한다고 예상한다면 안보 공백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일례로 미 2사단이 보유한 M1A1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차량, 아파치 헬기, 다연장로켓 등 첨단장비들만 해도 한국 기계화 사단 3개에 맞먹는 화력을 자랑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보유한 정보전력은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전력강화 요인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아직도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 위협임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는 매우 크다. 비록 북한의 군사위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주력 군사력은 대부분 비무장지대 쪽으로 전진배치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위협계산은 완전히 달라진다. 비록 북한의 주력 군사력이 상당히 낙후되고 경제 파국으로 인

해 전투지속력이 의심스럽다고는 하지만 일단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수도권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특히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거에 수도권을 향해 발사될 경우 수도권은 막대한 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궤도를 대 포병 레이더를 통해 15초 이내에 추적해 발사위치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하요새화되어 동굴을 드나들며 발사되는 북한의 장거리포를 완전히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공위성 및 정찰기의 활동을 통해 장사정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미군부대가 철수할 경우 안보 공백은 우려할 근거가 충분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국민의 대북 위협인식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심지어 젊은 층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오로지 미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더구나 중요한 문제는 감축의 시기이다. 미국은 2005년 12월말까지 감군을 완료할 것이라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미군이 감축되면 그들이 담당하던 임무가 우리 군에게 이양되어야 하며, 미군이 보유한 첨단장비들도 철수가 불가피하다. 2003년 6월 서울에서 열린 2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양측은 JSA 경비, 후방지역 화생방 제독, 대화력전 수행본부,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 등 10대 주요 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의 능력보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까지 미군이 감축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들 임무 이양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안보공백 우려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미동맹 자체의 정신이 흔들리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미 동맹 관계의 파열음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실상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불안은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될 증원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연합작계들은 모두 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과 전개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의회의 동의 또는 대통령 직권으로 증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개입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미국의 초기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맹의 신뢰가 깨지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유사시 증원군을 동원해 즉각 개입하리라는 보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한의 국력 격차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한국의 객관적 전력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 역지가 가능한 확실한 우위인지는 의문이다. 현대 전쟁의 성격상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양쪽 모두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된 남한이 잃을 것이 훨씬 많은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확실한 자주국방의 길은 북한이 감히 선제공격의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군 편제개편이 불가피하고 첨단군사력 개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도 필수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

## 주한미군 감축과 우리의 대응

미 2사단의 이라크 이동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이 급격히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맹관계도 서서히 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동맹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한미관계를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양국은 동맹의 주요 현안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이번 2사단 차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 양국이 2사단 차출 후 전력보강 문제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의 주요 변화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동맹의 건강 지표가 될 것이다. 만일 이번 2사단 이라크 차출이 충분한 협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 통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앞으로 한미동맹에 적신호로 간주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우리 정부의 태도는 꼭 무슨 일이 터진 후에야 대책을 협의한다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방식에 관련된 불안을 야기한다. 미국은 2002년 말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전제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해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자주국방 강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2사단 병력 이동에 관해서도 양국 정부간에 어떠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안보불안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또한 앞으로 주한미군 관련 주요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둘째, 좀 더 크게 보면 차제에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성격이 변하면서 과거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주한미군 배치의 의미는 줄어들었고 9·11 이후 국제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요소들—테러, WMD, 마약, 난민 문제 등—이 주요 안보문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중장기 목표 및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동맹의 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다. 양측은 동맹의 미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2005년 12월까지의 감군은 우리에게 너무 빠른 일정이므로 가능하다면 감군 시기를 미측과 조정하는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에 대한 미측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력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해야 한다. 그와 병행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 페이스를 빨리 해서 2011~2013년으로 예정된 자주국방 계획을 조기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국방비도 당장 GDP 3.0% 선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 협상으로 연결시켜 한반도 긴장완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최근 성과

를 거두고 있는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기존 신뢰구축 대화채널을 꾸준히 가동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동안 막연히 가능성으로만 생각해왔던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군을 보다 가볍고 보다 빠르게 첨단화시킨다는 군사혁신 관점에서 보면 미 2사단은 대표적인 구식 사단이다. 따라서 2사단을 질적으로 첨단화시키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던 일이다.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발표로 당장 한국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안보의 한 축을 이루어왔지만 미래에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안이하 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의식적인 동맹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워싱턴의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동맹으로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관론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워싱턴 정책결정자들의 레이더 화면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보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래 전반적으로 약화되어가는 양국간의 기본적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4년 06월 15일 미래전략연구원>